

“김제시의 이중적 행보 강력 비판”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 성명서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제시의 이중적 행보와 지역 갈등 조장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물류 체계와 산업 기반, 그리고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제이며, 그동안 군산시와 시민들은 무역항 지정 관철을 위해 수차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시민 쉼터대회, 단식투쟁, 서명운동까지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가 전북자치도가 구상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불리할 것을 우려해, 예정돼 있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지역 간 신뢰를 저버리고, 국책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제시는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중립성과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협약 파기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당초 자문위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모두 인정한 중립적 기구이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협약을 파기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땀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협력한다더니, 정작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앞두고 김제시가 돌연 협약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중적 태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시가 주장하는 투포트 무역항 방식은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어디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항만 간 경쟁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원포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 경쟁력은 통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자치도를 향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즉각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불신과 군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제시는 억지 주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객관적 의견을 존중할 것 △김제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즉시 중단할 것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할 것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에 송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전북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
조선 · 자동차 분야 숙련 기술인력 장기근속 지원 통한 고용률 향상 기대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3,700만원을 확보했다.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군산시는 △전북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 총 2개 사업에 선정됐다.

‘전북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재직 근로자 및 조선 기자재 기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년 본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위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선업 근로자가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0만 원, 지자체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1인당 1년에 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작년에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16개사)와 지역 조선기자재 기업체(6개사)를 지원했다.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은 신규 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현대·기아자동차 원·하청 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협력사가 밀집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총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선정된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사이버λεκ카 피해 대책 ·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항로 정박지 및 출발지 변경 촉구’ 건의안도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λεκ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이버λεκ카의 불법 행위 철저 단속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신속 마련 △허위정보유포· 명예훼손 행위 강력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의 발의한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항로 정박지 및 출발지 변경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의회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운항관리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항로 출발지를 변경할 것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군산카훼리호의 비효율적 운항을 중단하고, 효율적 운항을 위해 아미도 항을 정박지 및 출발지로 하는 대책을 수립을 건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통장을 우롱하지 말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30, 군산시는 통장을 우롱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월 20일 전면 개정된 이·통장 임명 규칙의 핵심은 ‘주민총회’ 제도 도입인데, 이는 겉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이장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이·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지역 이장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는 구조가 됐으며, 도심지역 통장들은 주민총회 개최 자체가 어렵고, 업무 강도도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상대 후보 비방, 법적 다툼 등 주민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임을 위한 금품 제공, 참석 인원 부풀리기 등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총회 제도를 도입했던 안동시 등 8개 지자체가 이런 이유로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나 규칙을 개정



했던 군산시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연임 허용안을 꺼낸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해 52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이·통장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발전기금과 사업권 관리 권한까지 더해져 감투 싸움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340명 읍면 이장의 연임 독점을 위해 16개 동지역 519명의 통장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끝으로 주민총회는 결과적으로 놓여온 지역의 새로운 세대 유입을 막고, 오히려 지역 불화를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군산시는 도심 통장을 무시하는 정치적 행정을 중단하고, 11개 읍면 지역 이장 선출 역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근절하고, 주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육상태양광 수익금을 군산시에 즉시 지급하라”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육상태양광 수익금을 군산시에 즉시 지급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산시는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EPC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서 100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은 상업운전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매출 745억 원, 순수익 약 150억 원을 올렸고, 군산시 몫으로 추산되는 금액만 44억 원에 달하는 상황



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전계약 기간 총 20년동안의 내부수익률(IRR) 5.52%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일 의원은 주주 간 협약서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정산과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20년 후 수익률 확정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군산시로 수익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시작한 만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금이 신속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년희망도시기본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익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그레이트(GREAT) 익산, 위드(WITH) 청년’이란 비전 아래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이 중심인 청년 친국 익산’을 목표로 분야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양정민 시의원을 비롯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익산시 의회와 △청년 네트워크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상공회의소 등 청년·대학·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익산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배달앱·온라인 판매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고, 2024~2025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063-853-441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